

공론화 미포함 대입과제 검토

- 2022 수능과목구조 제외

목 차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미포함 대입 과제



세부 과제별 검토



향후 일정

I.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미포함 대입 과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4.11.)

■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 전형서류 개선
 - 대필, 허위 작성 등의 우려가 있는 자기소개서 폐지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으로 대체 가능한 교사추천서 폐지
-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통 평가기준, 대학별 중점 평가요소, 모범사례 등 공개
 - 대입전형 별 신입생 고교 유형별·지역별 정보 공개
- 평가자 간 신뢰도 담보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제 의무화 및 평가 전 입학사정관제 회피·제척 의무화
- 대학입시 부정 비리가 확인될 경우, 부정 입학생 입학취소, 대학 행·재정 제재, 관계자 고발 및 징계요구 등 조치

I.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미포함 대입 과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4.11.)

■ 지필고사 축소·폐지

- 객관식 지필고사(소위 적성고사) 시행 금지

■ 면접·구술고사 개선

-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원칙
- 공통 문항을 출제하는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 지양 (부득이한 경우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출제)

■ 수능 EBS 연계율 개선

- 타당도 높은 수능 문항 출제, EBS 문제풀이 문제 해결을 위해 **EBS 연계율 유지·축소** (70% → 50%)
- 간접연계 방식으로 전환

II. 세부 과제별 검토: 자기소개서 폐지

[이송안] 대필, 허위 작성 등의 우려가 있는 자기소개서 폐지

■ 현황

- 학생부종합 운영 학교(150교 85,209명) 중 79%(116교 67,650명)가 자기소개서 요구
-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마련(교육부·대교협, '10학년도~)
- ※ 주요 개선사항: 외부 수상 실적 작성 시 0점 처리('15학년도), 부모 직업 기재 금지('19학년도) 등

■ 관련 의견

- (국가교육회의 부대의견) 자기소개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 필요
※ (좌담회 수렴의견)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자신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기회, 대학에는 판단 여지를 줄 수 있음
- (입학처장협의회) 대학 간 입장 차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학 자율에 두자는 의견
- (진학교사) △학생부 간소화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주요자료로서 유지 필요
△사교육 컨설팅 문제 고려 필요
- (학생·학부모)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의견과 시간 소모가 크고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의견
△사교육 문제를 보완하여 활용하자는 의견

II. 세부 과제별 검토: 자기소개서 폐지

[이송안] 대필, 허위 작성 등의 우려가 있는 자기소개서 폐지

■ 자기소개서 폐지의 장·단점 분석

- (장점) 대필·허위 작성 방지, 사교육 의존 해소, 학생 부담 완화
- (단점) 학생의 자기 표현 기회 제한, 대학별 또는 학과별 특성에 맞는 학생 고유의 특성 확인 곤란

■ 검토의견

- 국가교육회의 부대의견과 정책숙려를 거쳐 학생부 기재사항이 간소화될 점을 고려하여, 폐지보다는 대폭 개선 필요
- 자기소개서 개선방안(안)
 - (서식개선) "문항당 1000자~1500자, 서술형 에세이"에서 "문항당 500~800자, 사실 기록 중심 개조식"으로 개선
 - (확인)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가능
 - (부정제재)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0점 처리(미달시에는 합격)"에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로 개선

II. 세부 과제별 검토: 교사추천서 폐지

[이송안]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으로 대체 가능한 교사추천서 폐지

■ 현황

- 학생부종합운영 학교(150교 85,209명) 중 **21.4%(28교 18,190명)**가 교사추천서 요구
- 학생부종합전형 교사추천 공통양식 마련(교육부·대교협, '10학년도~)

■ 관련의견

- (국가교육회의) 특별한 의견 없음
- (대학입학처장협의회) 여러 대학이 찬성
- (진학담당교사) △장점만 나열하는 교사추천서보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효율적
△인성 측면 강조 가능하나 실효성 없음
- (학생·학부모) △가장 가까워서 지켜본 교사의 판단을 믿어야 △좋은 점만 기술하여 실효성이 없음
△형평성 문제 있음 △객관적이라는 의견과 교사에게 잘 보인 학생이 유리하다는 의견 대립

II. 세부 과제별 검토: 교사추천서 폐지

[이송안]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으로 대체 가능한 교사추천서 폐지

■ 교사추천서 폐지의 장·단점 분석

- (장점) 교사 간 추천서 기재 수준 차이로 인한 학생의 대입 당락 영향력 축소(공정성 문제 해소)
- (단점) 대학별·학과별 특성에 맞는 학생 고유의 특성 확인 곤란

■ 검토의견

- 교사 의견은 학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차원에서 교사추천서 폐지

II. 세부 과제별 검토: 학생부 기반 맞춤형 면접

[이송안]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원칙

■ 현황

- 2018학년도 기준 교과지식을 포함한 구술고사 실시 대학은 총 38개교

■ 관련 의견

- (국가교육회의) 별도 의견 없음

※ 찬반의견 공존 △사교육비 및 학업 부담 과중 △대학의 인재상, 전공적합성을 알아보는 시험으로 대학 자율 타당

- (대학) 서로 다른 학생간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구술고사 유지는 불가피
특히 학생부종합이 아닌 수능80%+면접20% 등에서는 학생부 서류평가가 없으므로 학생부 확인 면접 곤란
- (교사) △학생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학생부 확인 면접이 바람직
△학생부 기재가 미흡하여 면접을 통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술고사 폐지 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기 곤란 우려
- (학생·학부모) △면접은 학생부와 인성을 확인하는 용도
△대학별 인재상에 맞는 학생 선발을 위해 구술고사 유지 필요

II. 세부 과제별 검토: 학생부 기반 맞춤형 면접

[이송안]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원칙

■ 구술고사 폐지의 장·단점 분석

- (장점) 학생 부담 완화, 구술고사 대비 사교육 방지, 학생부 확인용 면접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 (단점) 정량평가로 평가할 수 없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 축소
구술고사는 법령상 가능하므로 폐지를 위한 법개정과정에서 대학 자율성 침해 논란

■ 검토의견

- [1안] 학생 부담 완화 및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기반의 확인용 면접 외에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 폐지** (선행학습금지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개정)
- [2안]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원칙**
 - 공통 문항을 출제하는 제시문 기반의 구술고사는 가능한 지양, 부득이한 경우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출제 (선행학습금지법 적용 철저)

II. 세부 과제별 검토: 평가기준, 평가요소, 모범사례 공개

[이송안] 공통 평가기준, 대학별 중점 평가요소, 모범사례 등 공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 관련 의견

- (국가교육회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요구가 높고, 그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므로 교육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
- (입학처장협의회) △평가기준은 지금도 모집요강에 공개 중, 다만,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모범사례 공개 시 맞춤형 사교육 컨설팅 우려, △모범사례보다는 탈락사례 공개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안
- (학생·학부모) 평가기준 공개 요구

■ 평가기준 공개의 장·단점 분석

- (장점)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제고에 기여
- (단점) △대학 자율성 침해, 정성평가 특성 상 평가기준 공개에 한계
△ 사교육 컨설팅이 개입된 맞춤형 학생부 양산 우려
※ (사례) '08년 A대에서 한국의 파브르(내신 성적 낮으나 곤충 연구 탁월) 선발을 모범사례로 공개
→ 이후 사교육컨설팅을 통해 만들어진 학생들의 지원 증가 → 이후에 A대는 모범사례 비공개 결정

II. 세부 과제별 검토: 평가기준, 평가요소, 모범사례 공개

[이송안] 공통 평가기준, 대학별 중점 평가요소, 모범사례 등 공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 검토 의견

-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평가기준 등 공개**
 - ※ 입학처장협의회와 협의하여 평가기준 공개 구체화 노력 지속
 - 또한, 대입정보포털을 활용하여 수험생 입장에서 대입정보 재구조화, 평가항목 해설 등 공개
 - 대학별로 부정적 감점 사례 공개
- 대학의 공정한 학생 평가를 위해 **대학별 공정성위원회에 외부위원**(변호사 등) **참여 추진**(대입전형기본사항 개정)

II. 세부 과제별 검토: 대입 전형별 신입생 정보 공개

[이송안] 대입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별 · 지역별 정보 공개

■ 현황

- 현재 ①대입전형 유형별 모집·등록 인원 현황과 ②전형 구분 없는 신입생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 공시

※ 현행 대학알리미 공개 틀

대학명	구분	전형유형	수시		정시	
			모집인원	등록인원	모집인원	등록인원
A대학	정원내	학생부종합	0000	0000	0000	0000
	정원외					

대학명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검정고시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			
A대학	0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 대학별 신입생 지역별 정보는 미공개

II. 세부 과제별 검토: 대입 전형별 신입생 정보 공개

[이송안] 대입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별 · 지역별 정보 공개

■ 검토 의견

- (고교 지역) 지역간 서열화 조장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유형별 분류 수준***으로 정보 공시

*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기타

※ 대입전형별 신입생 출신고교 지역별 정보(안)

대학명	구분	전형유형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기타
A대학	정원내/외	학생부종합	00명	00명	00명	00명
	정원내	수능	00명	00명	00명	00명

* 출신지역이 광역시/중소도시이면서 군/읍면지역일 경우 상위지역에 포함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별표2 개정 추진

II. 세부 과제별 검토: 입학사정관 신뢰도 제고

[이송안] 입학사정관 다수 평가제, 회피·제척, 부정비리 엄정 제재

■ 관련 의견

- (입학처장협의회) 현재도 2인 이상이 심사하고 있으며, 필요 시 명문화 가능

■ 검토 의견

-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추진 → **대입전형기본사항 개정**
 -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추진 → **고등교육법 개정**, 2020 대입전형기본사항*도 기 반영
 - * “대학은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 전형에 지원한 경우, 회피·제척 제도를 운영해야 함”
 - 입시 부정·비리 제재는 시행 중이나, 명시적 법규정 보다는 법 논리, 시정명령권, 대학 학칙 등으로 시행
 - * A대학 체육특기자 입시부정비리('16년)의 경우, 대학 학칙 및 시정명령권에 따라 입학취소 조치
- 입시 부정·비리에 가시적·엄정 대응 차원에서 법무공단 등의 자문을 거쳐 **명시적 근거법규정 신설** 추진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대학입시부정·비리 제재) 조항 신설

II. 세부 과제별 검토: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 금지

[이송안] '22년부터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소위 적성고사) 시행 금지

■ 적성고사 개요

- 국·영·수 등 대학이 정한 2~3개 교과목의 객관식 시험(수능시험과 문항 형태 유사)
 - 보통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내신성적 60% + 적성고사성적 40%
 - 다만, 실질적으로 내신성적의 실반영보다는 적성고사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향
- '15년 이후 교육부는 적성고사에 대한 수험부담·사교육 유발 등을 이유로 축소 지속 유도

구분	'15학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대학 수	13교	10교	12교	12교
모집인원	5,850명	4,562명	4,885명	4,636명

II. 세부 과제별 검토: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 금지

[이송안] '22년부터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소위 적성고사) 시행 금지

■ 관련 의견

- (국가교육회의) 별도 의견 없음
- (적성고사 실시대학) 대학 자율성 침해, 폐지 시 대체전형 없음 등을 이유로 반대

■ 검토 의견

- 교육부는 학생 부담, 대입전형료 인상 요인 등 문제점을 고려, 지속적으로 적성고사 억제를 유도했고,
△적성고사 문항이 수능과 사실상 유사 △'15년부터 폐지를 유도하였으며, 폐지 유도에는 한계에 도달
△적성고사 실질 반영률이 높아 사실상 적성고사로 선발하고 있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보기 곤란함에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되어 표준전형체계 교란 △사교육 유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대입 단순화 차원에서 적성고사 폐지**(대입전형기본사항 개정)
※ 수시 적성고사 폐지 시, 대학은 정시 수능, 수시 학생부교과·논술 등 확대 예상

II. 세부 과제별 검토: EBS 연계율 개선

[이송안] EBS 연계율 유지·축소(70%→50%) 및 간접연계 전환

■ EBS 연계 경과

- 사교육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수능과 EBS 연계 도입 ('04.2)
- '11학년도 수능부터 70%로 연계율 확대 발표('10.3)
- '16학년도 수능 영어부터 간접연계* 도입

*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 사용

■ 관련 의견

○ (국가교육회의) 별도 의견 없음

※ 일부 교원단체는 연계 폐지 의견 제출, 교원은 수업 중 EBS 교재 활용 및 암기식 교육 문제 지적, 학생·학부모는 시험 부담 경감 기능 언급

○ (교원) △EBS 교재로 진행되는 문제 풀이식 수업 문제

△농어촌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입시 준비가 가능

△연계율 70% 상황에서 고3 수업 및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 어려움

○ (학생·학부모) △EBS 교재로 수능 준비 가능 △일종의 수능가이드로 형평성 확보 가능

II. 세부 과제별 검토: EBS 연계율 개선

[이송안] EBS 연계율 유지·축소(70%→50%) 및 간접연계 전환

■ EBS 연계 관련 장·단점 분석

- (장점) 농어촌·도서벽지 등 취약 지역에서 수능 시험 대비 가능
 - 폐지 시에는 EBS 교재 외 다른 문제집까지 공부해야 하는 부담
 - 간접연계 시에는 EBS 직접연계 시 문제점(과잉 변형 출제로 인한 문항 오류 가능성) 해소 가능
- (단점) 고교 현장에서 EBS 문제풀이 수업 문제 여전 지적

■ 검토 의견

- **EBS 연계율을 50%로 축소 및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 전환**
 - EBS 연계정책을 폐지 시에도 다른 문제집으로 문제풀이 수업이 우려되므로 전면 폐지의 실익은 적음
 - 교실 수업의 변화와 연계율 축소가 동시에 적용되면,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고교교육 정상화가 기대
 - 특히, 간접연계 전환을 통해 영어지문 암기 등 교육과정 왜곡 및 단순 암기식 학습문제를 해소 가능
- ※ 간접연계는 과목별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비율 조정 가능

III. 향후 일정

- 대학, 교육청 등에 오프라인 의견수렴(간담회, 공식서면조사)
- 온라인(온교육: moe.go.kr/onedu.do) 의견수렴
- 8월 중 '2022 대입개편방안' 내에 포함하여 확정 발표